

6천억 규모 AI 2단계 사업 ‘속빈 강정’ 우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수기 “국비 5.1%만 지역에 귀속”

강수훈 “R&D 치중 시민체감 부족”

市 “모든 실증 광주에서 수행 예정”

총사업비 6천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광주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기술개발(R&D) 중심으로 설계돼 정작 지역 기업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국비 대부분이 전국 공모 방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큰 데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AI’ 구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지난 7일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이 광



박수기



강수훈

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6천억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천478억원을 제외하고 광주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8억원으로 전체 국비(3천600억원)의 5.1%에 불과하다.

반면, 4천억원 이상의 핵심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분산될 경우 광주 기업과 지역 경제가 얻을 실질적 성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단계 사업(R&D 600억원) 당시에 도 전국으로 예산이 분산돼 광주 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그대로 반복하는 꼴”이라며 “전북은 1조원 사업에 실증센터 4개 구축을, 대구는 연구소 3개 물리적 배치를 명시해 R&D 예산과 성과를 지역에 묶어둔 전략을 썼지만 광주는 기업의 지역 실증 의무 조항조차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AI는 R&D보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과 ‘페퍼런스’ 확보가 사업화의 핵심임에도 2단계 사업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1단계에서 구축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핵심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전문가나 의회와 협의 없이 직제를 개정했다. 50명 정도의 조직에서 3본부 체계가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의 설계안대로라면 광주시는 1천500억원 가까운 세금만 붓고 6천억

원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모양”이라며 “지금이라도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실증 의무화’ 및 ‘지역 기업 쿼터’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도 AI 2단계 사업이 시민 체감형 AI 구현보다는 R&D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 6천억원 중 대부분이 R&D에 집중돼 특정 연구기관과 기술 인력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지난달까지 광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AI 기업이 337곳에 달하는데 광주의 비전을 신뢰한 기업들이 느낄 허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지 실패와 관련, 그는 “단순한 경쟁의 패배가 아니라 준비 부족이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센터 후보지에서 광주가 제외되기 두 달 전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로부터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행정이 얼마나 준비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 귀속되는 국비가 308억원(5.1%)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AX R&D 사업은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전북·경남 모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R&D는 전국 공모 방식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들 지역에서 투입되는 지방비를 바탕으로 실증은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주 사업의 모든 실증은 광주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모두의 AI’, ‘도시·생활 혁신 과제’는 AX R&D 사업을 추진 중인 4개 지자체(광주·대구·전북·경남) 중 광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이명노 “광주 성폭력 피해 아동 절반 초등생”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가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사진)은 지난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년 간의 통계는 성폭력 양상이 이미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해바라기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20



이명노

05~2024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3천523명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동행 지원 등을 포함한 총 11만6천37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중 만 13세 미만 피해자는 1천947명으로 전체의 55.2%에 달했다.

최근 7년 간 접수된 사건 중 미디어·온라인을 통한 유인형 성범죄는 54.4%를 차지했으며, 이 중 채팅 앱을 통한 접근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변은진 기자



姜시장, 대인에술아시장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오후 동구 대인에술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비눗방울 미술소를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주 호남발전특위, GIST서 혁신성장 간담회

이병훈 “연구 성과 산업화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는 지난 7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지역 혁신성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는 이병훈 수석부위원장, 정성호 GIST 교학부총장, 호남발전특위 위원, GIST 관계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재학생들은 청년 정착 지원 방안, 청년 지원 제도 확대, 디지털자산 거점도시 광주 비전 실현을 위한 광주시와 중앙정부 정책·행정적 역할 강화, GIST 등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GIST 중앙기기 연구소와 슈퍼컴퓨팅센터 등 연구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첨단 연구 인프라와 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GIST는 국가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호남발전특위는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빛을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갉기 위해 출범한 만큼 GIST가 가진 기술력과 연구 성과를 산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상습침수 7개 지구 피해 예방 사업 박차

기후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2천67억 확보…빗물받이 확충 등 추진

전남도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나주 등 5개 시·군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17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제도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 시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잦았던 나주시(산포면·금천면), 담양군(고서면), 강진군(강진읍), 장성군(장성읍·서산면), 무안군(무안읍)에 대해 해당 시·군과 협력, 기후부에 지정을 지속 건의해 신청한 7곳 모두 선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지역에는 국비 1천240억원과 지방비 827억원이 집중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 빗물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빗물받이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남에선 올해까지 총 34개 지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천682억원을 투입했다. 12개 지구는 사업 완료, 14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 8개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실시절차 중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법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법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법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법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